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비상계엄 옹호 발언 정치인 및 유튜버, 경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하다고 옹호한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과 이용우 법률대책단장, 강훈식 국민홍보단장, 김동아·양문석 허위조작감시단장이 참석했다.

이번 고발 대상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 등 정치인 8명과 13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배승희 씨 등 유튜버 4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통해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고,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형법 제90조를 근거로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내란죄(제87조)를 범할 목적으로 선전하거나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내란선전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만큼, 특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위헌·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임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28일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거나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이를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으로 선전·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그 첫 단계로 앞으로 커뮤니티, SNS, 댓글 등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선전 및 선동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일 공식 출범하는 ‘민주파출소’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제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파출소는 허위 조작 정보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제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1. 피고발인 목록
2. 기자회견 전문
3. 기자회견 사진

#첨부1 [피고발인 목록]

순 번	구분	피고발인	직 업
1	정치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3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4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5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6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7		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8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9	유튜버	배승희	구독자 136만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 채널 운영
10		고성국	구독자 116만 유튜브 ‘고성국TV’ 채널 운영
11		이봉규	구독자 94.3만 유튜브 ‘이봉규TV’ 채널 운영
12		성창경	구독자 101만 유튜브 ‘성창경TV’ 채널 운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선전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내란 선전을 자행한 다음의 인물을 고발합니다.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그리고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고발할 것입니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내란 선전·선동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허위조작정보 제보센터’를 운영중에 있고 6일에는 허위 조작 제보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출범할 예정이오니, 관련 제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첨부3 [기자회견 사진]

